국회 지방행정개편 논의 어디까지

읍·면·동 준자치화 합의 道 폐지·시군통합 이견

2014년까지 개편 목표 입법화 잰걸음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에 의견접근을 보는 등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다.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행정체제개편추진위 구성 등에는 합의했으나, 도의 존폐 문제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여야가 현재까지 논의해 온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에 대해 조명해본다.

◇여야 합의사항=현재까지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우선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가칭)에 포함시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문제다. 개편추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2014년까지 실질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통령을 직속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과 국회 추천 각 8명, 지자체 추천 4명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두 번째로는 읍·면·동을 준자치기구화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보조 기능을 했던 기능을 주민자치기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행정적 보조 기능에 불과했던 기능을 주민들의 공동체 자치 및 근린 자치 성격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인구 과소구의 통합과 광역시 자치구를 행정구로 바꾸는 방안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직선제로 뽑지만 구의원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이와 함께, 통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이나 분권화와 관련된 각종 특례를 마련 지원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쟁점 사항=도의 개편 문제는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도의 폐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50~60개의 광역시 및 통합시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도를 존치하고 비효율적인 기능 중첩 부분만 제거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도의 개편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되는 2014년 이후 재논의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자치구와 행정구의 구분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특례 방안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군의 자율통합 문제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 구상과 방향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 통합을 독려하는 것은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자치구 통폐합을 통한 광역화 문제도 자치의 내실화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 여당이 행정체제개편 법안과 추진위 발족을 계기로 전국을 50~60개로 나누는 방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이번 국회 특위에서 만드는 기본법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여야간의 합의 사항과 최소한의 근거만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4일 오전 조선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선대 법인 정상화를 위한 광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자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시장 예비후보들이 조선대 4가지 정상화 원칙을 발표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윤난실(진보신당)·양형일·정동채(이상 민주당) 예비후보· 장원섭 광주·전남진보연대 상황실장·정찬용(무소속)예비후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철웅 일가 이사회 참여 안된다"

광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자 조선대 정상화 합의문 서명

광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4일 민주성과 공익성을 갖춘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의 조선대 정상화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박철웅 일가의 이사 참여는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은 4일 오전 11시 조선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선대 법인 정상화를 위한 광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자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조선대 민주동우회와 총학생회, 1·8교수모임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장 예비후보자인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을 비롯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상 민주당), 윤난실 전 시의원(진보신당), 정찬용 전 청와대 수석(무소속)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갖고 ▲조선대 법인 정상화는 구성원 및 지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비교육자 출신이자, 정치인인 강현욱씨의 이사장은 적절치 않다 ▲전 경영진 박철웅씨 일가의 이사 참여는 잘못된 것이다 ▲이사는 민주성과 공익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마땅하다 등의 4가지 정상화 원칙을 발표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일정상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박광태 시장은 이날 공동합의문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향후 조선대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또 강운태·이용섭 의원과 전갑길 광산구청장(민주당) 등의 예비후보자들은 공동합의문에 동의한다는 뜻을 알려왔다.

윤난실 예비후보는 "조선대 시립화를 통해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양형일 예비후보는 "광주시·전남도 각 1명, 시민단체 1명, 조선대 구성원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는 선출방식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채 전 장관은 "구 경영진 측 이사 선임은 적절치 않고, 화합과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조선대 구성원을 중심으로 7만2천명의 서포터즈를 구성해 대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장원섭 실장은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사분위와 사립학교법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돔구장 부지 세하지구는 아니다

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3년 전 택지개발 계획도면 유출로 땅값이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광주시 서구 세하지구에 대한 규제가 모두 풀린다. 광주시 등 지자체가 공공개발을 당분간 포기하게 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소유주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하지구가 돔구장 예정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4일 "지난 2007년 2월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구 매월동·세하동·벽진동 일대 753필지 86만2천658㎡(세하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분간 문화복합단지와 같은 공적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시는 지난 2007년 초 세하지구를 택지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택지개발 도면이 유출되고 보상금을 노려 급조한 주택들이 들어서자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문화산업복합단지 대상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세하지구가 개발제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가설건축물 설치 등을 제외한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이 지역 땅값이 크게 올라 공공개발을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해당 토지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시의 세하지구 내 문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또 광주시가 민자 2조5천억원을 유치해 조성할 예정인 돔구장 및 스포츠·레저·관광단지 부지에 세하지구가 포함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공공개발을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한 것은 당분간 공공개발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택지개발계획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세하지구의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해 공공개발을 하는 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서구 세하지구에 아파트 6천 가구가 들어서는 택지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6년 9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같은 해 10월 세하지구 개발도면이 부동산 업체에 유출되면서 예정지구 내 땅값이 5배 이상 치솟는 등 부동산 투기가 확산됐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요타 리콜 손실액 2조3천억

광주 등 국내 등록대수도 급감

도요타가 가속 페달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 사태로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최고 인기 차종인 프리우스에서도 제동장치 결함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손실이 1천800억엔(약 2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등 국내 등록대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도요타 측은 일본에서 프리우스의 브레이크 결함과 관련한 민원을 77건 접수했고, 미국에서도 100건에 달하는 민원을 받는 등 프리우스에 대해서만 180건 가까운 민원이 들어왔다고 4일 밝혔다.

불과 하루 전인 3일 일본 정부가 프리우스의 제동장치 관련 민원 14건을 확인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프리우스의 브레이크 민원이 일본에서만 하루 만에 5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3일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하지 말라" 발언까지 겹쳐 도요타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자 일본 정부가 도요타에 프리우스 리콜까지 검토를 요청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국토교통상은 "도요타에 프리우스 리콜 가능성까지 포함, 실상을 파악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요타는 가속 페달 결함으로 지난해 말 500만대를 리콜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도 미국에서 RAV4와 코롤라스, 아발론, 하이랜더, 캠리 등 8개 차종 230만대를 리콜했다.

여기에 영국에서도 도요타 차량 7개 모델 18만865대가 리콜 대상에 올랐다고 AFP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도요타 브랜드의 국내 등록이 급감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1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도요타 브랜드의 등록대수가 441대로, 작년 12월의 660대에 비해 3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 역시 320대를 기록, 전월의 508대에 비해 37.0% 줄었다.

지난 1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총 6천377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69.6% 증가했고 전월보다 4.3%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도요타의 급감 현상은 두드러진다. 광주의 경우 작년 12월 14대의 도요타 브랜드가 등록됐으나 지난 1월엔 2대로 급감했다.

한편, 도요타자동차는 4일 리콜에 따른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말) 손실을 비용부담 1천억엔, 판매감소 700억~800억엔으로 전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